

혼인상태와 투표참여: 성별의 조건효과*

김기동 ■ 미주리대학교**

정다빈 ■ 한국의국어대학교***

이재묵 ■ 한국의국어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혼인관계의 형성과 해체가 가지는 투표참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보다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이다. 결혼을 통한 혼인관계의 형성은 소득의 향상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여주거나 삶의 안정성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간 정치적 대화를 통해 정치심리적 자원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투표참여의 성별격차를 고려했을 때, 그것의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혼상태의 유권자들은 다른 혼인상태 특히, 사별, 이혼, 별거상태의 유권자들보다 투표참여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또한 그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주제어: 투표참여, 혼인상태, 결혼,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I. 서 론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혼인상태와 투표참여 간 관계를 분석하고

* 발전적인 심사평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또한 이 논문은 한국의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 주저자. 미주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후보 (E-mail: gidongkim@mail.missouri.edu)

*** 공동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수료 (E-mail: aaabic@naver.com)

**** 교신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E-mail: jaemook@gmail.com)

자 한다. 전통적인 투표참여 이론 중 하나인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보인다고 설명한다(Lazarsfeld et al. 1965; Leighley & Nagler 2014; Schlozman et al. 2018). 특히, 이 모델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자의 증가는 투표참여에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결혼을 통한 혼인관계의 형성은 소득수준과 삶의 안정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경우 교육수준의 향상 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부부 및 가족구성원 간 정치적 대화의 활성화는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 등의 정치심리적 자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투표 참여와 관련하여 서구에서는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Nickerson 2008; Sinclair 2012; Sinclair et al. 2012), 부부 및 배우자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toker & Jennings 1995; Gruneau 2018).

그러나 이에 반해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와 자녀 간 관계 등 가족이 가지는 정치참여에 대한 효과에는 관심을 가져왔으나(홍재우 2012; 김도경 2013; 박선경·신재혁 2019), 혼인상태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구성 중 출발점이자 핵심인 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혼인관계의 유지와 해체가 가지는 투표참여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양자 간 관계에 대한 분석에 더하여, 그것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비록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증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김성진 2015), 사회경제적 성별격차는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에서도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참여수준을 보이는 등 정치적 성별격차도 목격된다(신광영 2011; 이재철 2018; 김창환·오병돈 2019; Koo 2019). 따라서 혼인상태가 투표참여와 관련이 된다면, 혼인관계의 형성이 투표참여의 성별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사별, 이혼, 별거 등 혼인관계의 해체가 오히려 성별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의 발견은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투표참여에 대한 혼인상태의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기혼상태의 유권자들은 다른 혼인상태, 특히 사별, 이혼, 별거상태의 유권자들보다 더 높은 투표참여 확률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러한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정치에서 결혼 및 혼인상태가 정치참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논의함으로써 투표

참여의 사회경제적 모델의 이론적·경험적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혼인상태와 투표참여

투표참여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 중 하나인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이하 SES) 모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보인다(Lazarsfeld et al. 1965; Leighley & Nagler 2014; Schlozman et al. 2018).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다양한 자원과 기회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은 자신의 정치적 자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한 집단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줌에 따라 정치적 동원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기도 한다(Rosenstone & Hansen 1993; Nie et al. 1996). 특히, SES 모델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투표참여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비용을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보의 획득 및 처리에 관한 무형의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erba et al. 1995).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결혼은 혼인관계의 형성을 통해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Stoker & Jennings 1995; Schwartz & Mare 2005; Bhatti et al. 2020). 혼인관계와 투표참여 간 관계에 관한 설명은 직접적 메커니즘과 간접적 메커니즘 두 가지 모두에 의해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직접적 메커니즘으로서 결혼을 통한 혼인관계의 형성은 미혼상태에서보다 삶의 안정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Kingston & Finkel 1987), 배우자로 인해 SES 모델에서 핵심적인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Peterson 1996). 더욱이, 투표참여는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Nickerson 2008, Rolfe 2012; Fieldhouse & Cutts 2012; Sinclair et al. 2012), 개인이 단독적으로 투표참여를 결정하는 것보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와 함께 이를 논의하거나, 더 나아가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 간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참여의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정치심리 및 정치커뮤니케이션 문헌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듯이 가족 간 정치적 대화가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그리고 정치지식 수

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Beck 1991; Stoker & Jennings 1995; Delli Carpini & Keeter 1996; McDevitt 2005; Smith 2018).

더욱이, 결혼이 투표참여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심리적 차원의 효과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서적 양극화에 의해서도 커질 수 있다. 정서적 양극화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정치적 선호를 가진 사람들을 데이트 상대로 선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배우자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Iyengar et al. 2012; Huber & Malhotra 2017). 정서적 양극화가 정치참여를 부추긴다는 경험적 발견을 고려했을 때(Huddy et al. 2015), 혼인관계의 형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종선호(political homophily)의 현상은 배우자 간 또는 가족구성원 간 동질적인 선호와 입장을 전제로 한 정치적 토론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투표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Beck 1991; Stoker & Jennings 1995).

이처럼, 혼인관계와 관련한 직접적 메커니즘에 근거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은 실제로 미혼이거나 이혼 및 사별한 사람들보다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투표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경험적 발견을 제시한다(Wolfinger & Rosenstone 1980; Kingston & Finkel 1987; Wolfinger & Wolfinger 2008; Leighley & Nagler 2014). 또한 그것의 반대 논리로서, 이혼이나 사별 등 혼인관계의 해체가 개인의 투표참여를 소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발견도 제시된다. 이는 혼인관계의 해체가 일상적 스트레스의 향상으로 인해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의 하락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Kern 2010; Hobbs et al. 2014). 특히, 미국에서는 이혼이 거주지의 안정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마다 다른 투표등록제도의 어려움에 더욱 빈번히 직면하게 되고, 이것이 투표참여를 감소시키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Sandell & Plutzer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또 다른 연구는 결혼과 동거의 투표참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보다 이혼과 사별의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Voorpostel & Coffé 2012).

한편, 혼인관계의 형성은 간접적 메커니즘으로서 하나의 집단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은 정치공동체 속에서 정치참여를 부추기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정치참여에 핵심적인 정보의 전달(information), 정치적 충원(recruitment), 그리고 조직적 활동(organizing) 등의 요소들이 가족 구성원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쉽게 공유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투표독려 운동("Get-out-the-vote")의 메시지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메시지의 효과는 그 사람에게서 머물지 않고 그 가족의 구성원 전체에게 공유될 수 있다(Nickerson 2008; Sinclair et al. 2012). 이와 유사하게,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에 소속될 경우, 그 집단의 정치적 선호와 전략이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전달되기도 한다(Sinclair 2012). 특히, 이러한 매개체로서의 결혼 및 가정의 기능은 투표참여와 같은 관습적 정치참여 유형뿐만 아니라, 집회와 시위 등 비관습적 참여 유형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Lyon & Schaffner 2020).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아직까지 결혼을 통한 혼인관계의 형성과 투표참여 간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양자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주는 메커니즘에 대한 간접적 증거들을 제시한 연구들은 존재한다. 예컨대, 홍제우(2012)와 김도경(2013)은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 내 정치적 대화가 그들의 정치적 선호 및 의식을 형성하는 주요한 매개체로서 기능함을 보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치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의 연장선상에서, 박선경과 신재혁(2019)은 청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성인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한 설문자료를 활용하더라도, 가족 간 정치적 대화는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그 결과로서 투표참여를 부추길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단순히 결혼상태로의 진입에 집중하기보다 혼인관계의 형성 및 해체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혼인상태를 미혼상태뿐만 아니라 사별, 이혼, 별거와 비교한다.

가설 1-1: 기혼상태의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보다 투표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가설 1-2: 기혼상태의 유권자들은 사별, 이혼, 또는 별거 등 혼인관계가 해체된 유권자들보다 투표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2. 성별의 조건효과

앞선 가설은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혼인관계의 형성이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혼인관계의 해체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 관계는 성별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의 이질적 효과는 남성과 여성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

위의 차이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혼인상태와 투표참여 간 관계에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은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결혼을 하기 이전의 미혼상태로서 개인들은 애초에 정치적 자원으로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정치참여 수준에 영향력을 발휘한다(Verba et al. 1995; Leighley & Nagler 2014; Schlozman et al. 2018). 그러나 SES 모델에 근거한 기존의 연구들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별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와 이와 관련된 정치심리적 자원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의 격차와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용이하게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거나(Inglehart & Norris 2000), 여성보다 남성의 정치지식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등 전통적인 성차의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Delli Carpini & Keeter 1996; Dow 2009).

비록 일부 연구들이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쟁력 상승, 여성 정치인의 등장 등으로 인해 투표참여에서 성차가 줄어들거나 현대적 성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지만(Atkeson 2003; Leighley & Nagler 2014),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핵심적인 교육수준은 성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에게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거나(Bobbitt-Zeher 2007), 정치지식과 관련해서도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인된다(Dow 2009). 특히, 흥미롭게도, 한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김성진 2015), 여전히 현대적 성차가 아닌 전통적 성차의 패턴이 발견됨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릴 뿐만 아니라(신광영 2011; 김창환·오병돈 2019), 투표참여에 있어서도 더욱 적극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이재철 2018; 권혁용·한서빈 2018; Koo 2019).¹⁾ 따라서 여성보다 남성이 이미 정치적으로 더욱 적극적이라면, 혼인관계 형성의 투표참여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남성에게서는 일종의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Gruneau 2018). 더욱이, 이러한 기대는 별거, 이혼, 사별 등 혼인관계의 해체가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 역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1) 전통적 성차와 현대적 성차를 논의할 때, 한편으로는 성별에 따른 투표참여의 격차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에 따른 이념의 차이 및 투표선택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비록 후자의 맥락에 근거하여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여성의 진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대적 성차에 대한 보고가 존재하지만(강주현 2020), 투표참여에 관심을 가지는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맥락에 근거하여 전통적 성차에 주목했다.

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Voorpostel & Coffé 2012). 따라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2: 혼인상태에 따른 투표참여 수준의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III. 데이터와 변수

위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제시된 연구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중에서 가장 최신 연도인 2018년 자료를 이용한다(김지범 외 2019).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 통해 제공되는 KGSS 자료는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다단계 지역 확률 표집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여, 면대면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된다. 2018년 KGSS 설문조사에는 1,031명의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이 자료에는 본 연구의 핵심적 관심변수인 혼인상태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다른 설문조사가 기혼 또는 미혼 등의 단순화된 응답을 통해 혼인상태를 측정하는데 반해서, 이 자료는 기혼,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동거 등 다양한 유형의 혼인상태에 대한 응답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측정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투표참여이다. 지난 2018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렸으며, 설문조사원은 응답자에게 “귀하는 올해 6월 13일(2018. 06. 13)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투표하셨습니다?”라고 질문했다. 응답자가 “투표했다”라고 답했을 경우 1의 값을,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을 경우 0의 값을 부여했다. 따라서 종속변수가 이분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이항 로짓 모델(binary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높은 반면,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낮게 나타나는 등 선거의 수준에 따라서 투표참여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투표참여와 관련되는 요인들의 영향력 역시 선거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참여를 종속변수로 이용할 경우 투표참여의 추진요인(driving force)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용이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밀접한 이해관계 및 광범위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미 높은 수준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선거 그 자체가 투표참여의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참여를 부추길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의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mith 2001). 반대로, 일반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지방선거에서는 추가적인 투표참여의 추진요인이 나타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미국정치의 연구들도 대통령 선거와 중간 선거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방 수준과 주(state) 수준 간에도 서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Smith 2001; Grumme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방선거라는 낮은 수준의 선거분석은 분석적 용이성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변수를 소개하기 전에, 종속변수의 측정과 관련한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투표를 비롯한 정치참여의 측정을 위해서 많은 설문조사 자료는 응답자에게 지난 선거에서의 참여에 대해 회고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응답자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을 하기 마련인데, 이 경우 응답자의 기억이 비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또는 응답자가 면대면 조사의 환경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사회적 바람직함(social desirability)을 고려하여 거짓보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비록 설문자료에서 이러한 응답의 왜곡이 무작위하게 분포한다면, 그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추론이 크게 편향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왜곡은 체계적으로 분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했다고 거짓보고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전자의 사람들이 후자의 사람들보다 바람직한 시민성에 대해 더욱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Silver et al. 1986; Granberg & Holmberg 1991). 만약 미국에서와 같이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투표참여에 관한 자기보고(self-report)를 카운티(county) 수준의 투표기록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교정할 수 있겠지만,²⁾ 많은 민주국가들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2)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투표참여의 자기보고 응답이 가지는 왜곡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Katz & Katz 2010; Berent et al. 201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투표참여의 자기보고가 초래할 수 있는 왜곡은 설문조사에 잠재된 또 다른 문제점에 의해서 상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은 투표참여에 소극적인 사람들보다 적극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투표참여에 소극적인 사람들의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하다는 사실은 앞선 자기보고의 왜곡이 투표참여자들에 대한 과대추정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Lutz & Marsh 2007, 542). 비록 국내에서는 두 가지 편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양자의 상쇄 가능성으로 인해 자기보고에 의한 투표참여 문항은 해외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연구에서도 여전히 널리 활용되고 있다(Leighley & Nagler 2014; 권혁용·한서빈 2018).

2. 독립변수

혼인상태와 투표참여 간 관계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독립변수는 혼인상태이다. 설문조사에는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묻기 위해서 “응답자의 혼인상태는 기혼,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동거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라는 문항이 이용되었다. 이 문항에 대한 2018년 KGSS 조사 참가자들의 응답분포는 기혼(557명, 54.29%), 사별(140명, 13.65%), 이혼(47명, 4.58%), 별거(14명, 1.36%), 미혼(258명, 25.15%), 그리고 동거(10명, 0.97%)와 같았다. 실제 분석에서는 먼저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혼상태의 응답자들에게 1의 값을, 그 외의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동거상태의 응답자들에게 0의 값을 부여했다.³⁾ 다음으로, 혼인관계의 해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가설1-2를 검증하기 위해서 미혼 및 동거상태의 응답자를 제외한 채, 기혼상태의 응답자들에게 1의 값을, 그리고 비교기준으로서 사별, 이혼, 별거상태의 응답자들에게 0의 값을 부여했다.

한편, 본 연구의 가설2는 가설1-1과 가설1-2에서의 혼인상태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1의 값을, 그리고 남성의 경우 0의 값을 부여한 응답자의 성별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여, 앞선 혼인상태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분석모델에 포함함으로써 가설2를 검증한다.

3) 비록 동거가 혼인관계의 형성에서 얻어지는 정치심리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동거가 법적 미혼상태이기 때문에 동거를 미혼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그러나 동거상태를 혼인으로 취급하든, 미혼으로 취급하든 본 연구의 경험적 발견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지 않음을 미리 밝힌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관심변수들 외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및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서 포함한다. 먼저, 정치적 변수로서는 당파성의 유무와 정치이념을 포함한다. 당파성은 정치적 태도를 영속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Bartels 2002), 강한 당파성을 가지는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당파성에 따라 투표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민정·홍지영 2011; 이재철 2018). 그러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투표선택이 아닌 투표참여이므로 지지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당파적 유권자(0)와 무당파 유권자(1)로 구분하여 코딩했다. 또 다른 정치적 변수인 정치이념은 응답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로 진보적인지 또는 보수적인지를 질문하였으며, 응답자는 “매우 진보적”(1)에서 “매우 보수적”(5)의 응답척도 중 하나를 선택했다. 이 외에도 이론적으로 정치관심도나 정치효능감 등의 변수들이 투표참여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2018년 KGSS 자료에는 관련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파성(무당파)과 정치이념만을 정치적 변수로서 통제했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거주지역 유형(도시/농촌), 그리고 거주지역을 포함한다. 먼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혼인상태의 효과가 근거하는 SES 모델의 핵심적 변수이다(Verba et al. 1995; Leighley & Nagler 2014; Schlozman et al. 2018).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양자를 통제했다(김옥 2013; 권혁용·한서빈 2018).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은 “고졸미만”(0), “고졸”(1), “대재이상”(2)의 3점 척도로서 구분했으며, 소득수준은 사분위수(quadrant)에 따라 4개 범주로 나누어 구분했다.⁴⁾ 이 외에, 응답자의 실제 연령을 연속형 변수로서 포함했으며, 거주지역의 유형은 도시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부여했다. 끝으로,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제주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이상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표 1>에 제시한다.

4) 소득의 각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다음과 같다: 1분위 224명(25.03%), 2분위 255명(28.49%), 3분위 194명(21.68%), 그리고 4분위 222명(24.80%).

〈표 1〉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투표참여	1,012	0.823	0.381	0	1
혼인상태(가설1-1 관련)	1,026	0.542	0.498	0	1
혼인상태(가설1-2 관련)	758	0.734	0.441	0	1
성별(여성)	1,031	0.546	0.498	0	1
무당파	1,008	0.125	0.3320	0	1
정치이념	999	2.774	0.996	1	5
교육수준	1,030	1.211	0.828	0	2
소득수준	895	1.462	1.116	0	3
연령	1,030	51.042	18.917	18	97
도시거주	1,031	0.739	0.439	0	1
거주지역	1,031	.	.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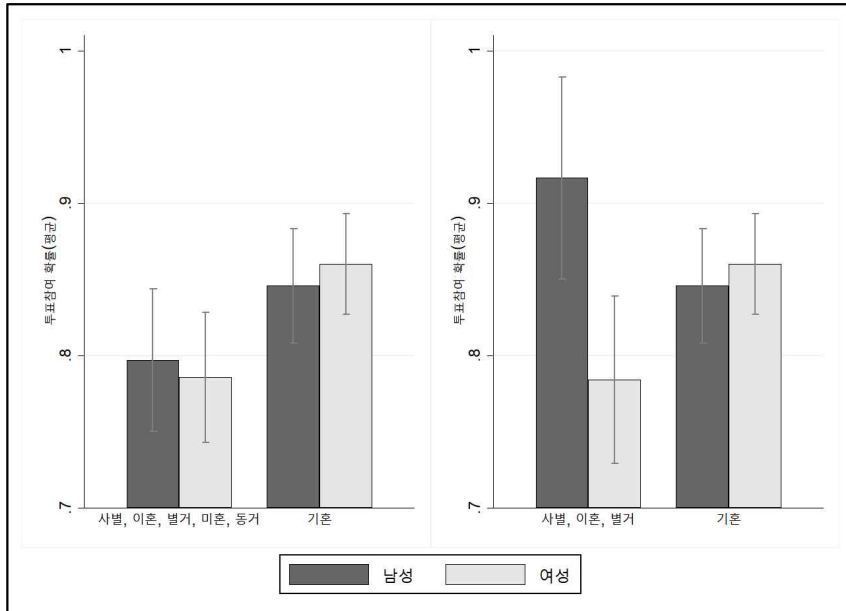
출처: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IV. 분석결과

1. 기술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서, <그림 1>을 통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변수들 간 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혼인상태에 따른 투표참여 수준과, 각각의 혼인상태 내에서 성별에 따른 투표참여의 차이를 살펴본다. <그림 1>의 좌측 패널은 기혼상태를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동거상태와 비교한 것이다(가설 1-1 관련), 우측 패널은 기혼상태를 사별, 이혼, 별거상태와 비교한 것이다(가설 1-2 관련).

〈그림 1〉 혼인상태와 성별에 따른 투표참여 수준(평균)



참고: 각 집단별 투표참여 변수의 평균값과 90% 신뢰구간이 제시됨.

먼저, <그림 1>의 좌측 패널에 따르면, 기혼의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서 높은 투표참여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그림에 보고되지 않음; $t=-2.616$, $p=0.009$). 따라서 이는 가설 1-1의 기대에 상응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각각의 혼인상태 집단 내에서 성별 간 비교를 실시해보면,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을 통해 확인되는 패턴은 가설2에서 제시된 성별의 조건효과, 특히 혼인상태에 따른 투표참여 수준의 차이가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란 기대에 부합한다. 말하자면, 기혼상태 내에서 투표참여의 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반면 ($t=0.468$, $p=0.639$),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동거의 상태에서는 반대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낮은 투표참여 수준의 패턴이 확인되는 것이다($t=-0.293$, $p=0.768$).

이러한 패턴은, 미혼 및 동거상태의 유권자들을 제외한 우측 패널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비록 여기서는 기혼상태의 유권자들과 사별, 이혼, 별거상태의 유권자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투표참여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

나(그림에 보고되지 않음; $t=-1.256$, $p=0.209$), 집단 내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눈에 띈다. 특히, 사별, 이혼, 별거상태 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연히 낮은 수준의 투표참여를 보였다($t=2.076$, $p=0.039$). 이는 혼인관계의 해체가 가져오는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서구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상통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다(Voorpostel & Coffé 2012).

2. 회귀분석

이 장에서는 앞선 기술 분석에서의 패턴을 토대로 회귀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한다. 아래의 <표 2>는 이항 로짓 모델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모델 1과 모델 2에서는 기혼상태를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동거상태와 비교한 것이며, 모델 3과 모델 4에서는 사별, 이혼, 별거상태와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모델 1과 모델 3은 각각 가설1-1과 가설1-2를 검증하며, 혼인상태와 성별 간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모델 2와 모델 4는 가설2를 검증한다.

먼저, 모델 1에서는 기혼상태의 유권자들과 그 외의 혼인상태의 유권자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투표참여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혼인상태에 따른 투표참여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가설 1-1). 그러나 모델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혼인관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 기혼상태의 유권자들은 사별, 이혼, 별거상태의 유권자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투표참여를 보여준다(가설 1-2). 이에 대한 실질적 해석을 위해, 모델 3에 포함된 연속형 변수들을 평균값에, 그리고 명목형 변수들을 중위값에 고정한 채 결혼의 효과를 예측확률로서 표현하면, 기혼상태의 유권자들과 사별, 이혼, 별거상태의 유권자들 간 투표참여 확률의 차이는 약 10%p로 확인된다.

흥미로운 점은 혼인상태의 유의미성이 모델 1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 모델 3에서만 나타난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가능성은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혼인관계 형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혼인관계의 해체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일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 모델 1에서 기혼상태의 비교기준은 미혼과 동거가 포함되는 반면, 모델 3의 비교기준에는 양자가 포함되지 않는다.⁵⁾ 다시 말해서, 전자

5) 한편, 사별, 이혼, 별거를 제외한 채 '기혼'을 '미혼 및 동거'와 비교한 회귀분석에서는 혼인상태에 따른 투표참여 확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에서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결혼관계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반해, 후자에서는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유권자들 중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와 결혼관계가 해체된 경우를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서만 혼인상태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는 것은 결혼관계 해체의 부정적 효과가 결혼의 긍정적 효과보다 더욱 두드러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해석은 앞선 기술 분석의 패턴과도 상통한다.

〈표 2〉 혼인상태와 투표참여

	기혼 vs 그 외		기혼 vs 사별, 이혼, 별거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혼인상태	0.13(0.21)	-0.29(0.32)	0.47(0.28)*	-0.92(0.66)	
성별(여성)	0.03(0.19)	-0.35(0.29)	-0.06(0.24)	-1.57(0.66)**	
혼인상태 × 성별		0.72(0.41)*		1.88(0.72)***	
무당파	-0.98(0.25)***	-1.02(0.25)***	-0.98(0.28)***	-1.07(0.29)***	
정치이념	-0.14(0.10)	-0.13(0.10)	-0.11(0.11)	-0.08(0.11)	
교육수준	0.41(0.17)**	0.42(0.17)**	0.11(0.19)	0.12(0.20)	
소득수준	0.12(0.11)	0.13(0.11)	0.08(0.14)	0.08(0.14)	
연령	0.02(0.00)**	0.03(0.00)***	0.02(0.01)**	0.02(0.01)**	
도시거주	-0.44(0.25)*	-0.45(0.25)*	-0.34(0.27)	-0.38(0.27)	
지역 (서울)	경기	-0.25(0.31)	-0.29(0.32)	-0.48(0.38)	-0.60(0.38)
	경상	-0.34(0.29)	-0.35(0.29)	-0.53(0.35)	-0.54(0.35)
	전라	0.25(0.41)	0.25(0.41)	-0.11(0.48)	-0.21(0.49)
	충청	-0.68(0.34)**	-0.71(0.34)**	-0.89(0.40)**	-0.94(0.41)**
	강원제주	1.28(0.76)*	1.21(0.76)	1.35(0.106)	1.36(1.06)
상수	0.45(0.72)	0.46(0.72)	0.89(0.102)	1.92(1.15)*	
Log-likelihood	-350.943	-349.375	-263.632	-259.371	
AIC	729.887	728.751	555.266	548.743	
BIC	796.188	799.788	617.900	615.851	
N	842	842	648	648	

참고: * $p \leq 0.1$; ** $p \leq 0.05$; *** $p \leq 0.01$ (양측검정). 로짓 회귀계수와 표준오차(괄호)가 보고됨.

두 번째 가능성은 연령과 관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혼과 동거는 비교적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주로 나타나는 혼인상태이기 때문에,⁶⁾ 미혼과 동거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젊은 유권자의 상당수가 표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모델 3의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들 중 약 12%(82명)만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결혼의 효과가 주로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적이거나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40대 이상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모델 1을 다시 추정해본 결과,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⁷⁾ 따라서 두 번째 가능성보다 첫 번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설득력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⁸⁾

이어서, 가설 2와 관련하여 혼인상태와 성별 간 상호작용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설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혼인상태에 따른 투표참여 수준의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을 위해, <그림 2>에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의 한계효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상호작용 변수가 포함된 모델 2와 모델 4를 바탕으로 했으며, 각각의 모델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을 평균값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혼인상태의 변수와 성별 변수의 변화에 따른 예측 확률 값을 보여준다.

먼저, 모델 2에 근거한 좌측 패널을 통해 기혼상태와 그 외의 혼인상태(사별, 이혼, 별거, 미혼, 동거)를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우 다른 혼인상태에서보다 기혼상태에서 투표참여 확률이 약 5.3%p 증가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약 3.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모두, 서로 다른 혼인상태에서 추정된 예측확률의 신뢰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결론짓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어서, 모델 4에 근거한 우측 패널을 통해 기혼상태와 사별, 이혼, 별거상태를 비교해본다. 여성의 경우, 혼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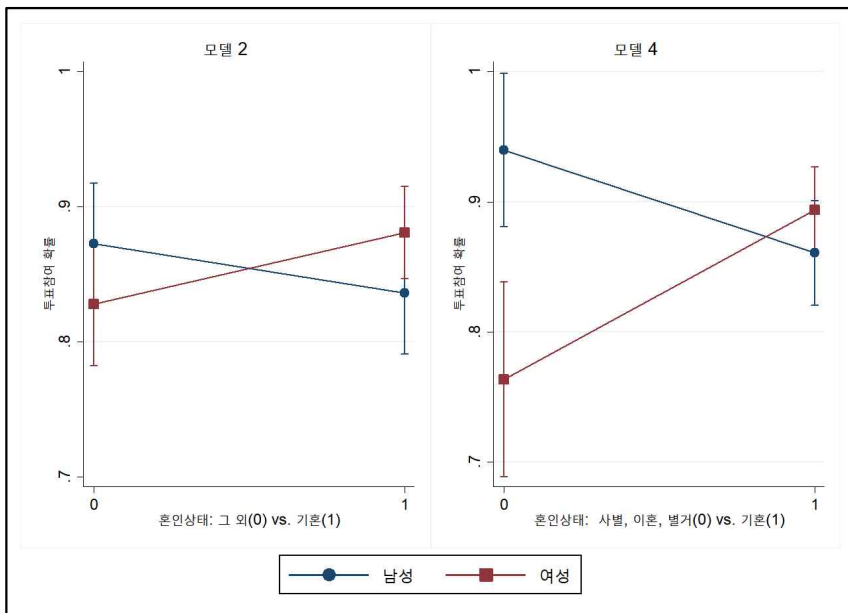
6)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는 2018년 KGSS 설문자료에서는 미혼상태의 약 82%(211명)와 동거상태의 약 60%(6명)가 20대와 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이었다.

7) 동일한 논리에 근거하여 혼인상태의 변수와 연령 변수 간 상호작용을 검증해보았으나, 유의미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8) 그러나 본 연구가 단일연도의 설문자료만을 분석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긴 시간에 걸쳐 누적된 설문자료를 이용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와 달리 만약 결혼의 효과가 연령과 관련하여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 연령효과에 의한 것인지 혹은 세대효과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계가 해체되었을 때보다 혼인상태를 유지했을 때 투표참여 확률이 약 13%p 증가하며, 서로 다른 혼인상태의 조건에서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오히려 약 7.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신뢰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요컨대, 혼인상태에 따른 투표참여 수준의 차이는 가설 2의 기대와 같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림(모델 4)에서 보이듯, 혼인관계의 해체에 따른 투표참여 확률의 감소효과는 남성에게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반면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 2〉 성별의 조건효과



참고: 한계효과 그래프는 모델 2(좌측 패널)와 모델 4(우측 패널)에 근거하며, 90% 신뢰구간이 표기됨.

끝으로, 통제변수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정치적 변수로 포함된 당파성은 모든 모델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앞선 연구들에서와 같이 당파적 유권자들이 무당파 유권자들보다 더 높은 투표참여 수준을 보였다(김민정·홍지영 2011). 마찬가지로, 연령 역시 모든 모델에서 일관되게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

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그 외의 사회경제적 변수들 중에서는 SES 모델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인 교육수준이 모델 1과 모델 2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이재철 2018; 권혁용·한서빈 2018). 그러나 모델 3과 모델 4에서는 교육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⁹⁾ 한편,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모든 모델에서 일관되게 서울의 유권자들보다 낮은 투표참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혼인상태와 투표참여 간 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혼인상태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여 성별의 조건 효과를 검증했다. 혼인상태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상태는 투표참여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기혼상태를 미혼, 동거, 사별, 이혼, 별거상태와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혼과 동거를 제외한 채 기혼상태를 사별, 이혼, 별거상태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차이가 결혼의 긍정적 효과보다 결혼관계의 해체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의한 현상인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긴 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설문자료를 통해 표본 수를 늘리거나 패널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발견은 혼인상태에 따른 투표참여 수준의 차이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 점이다. 그러나 기혼상태를 미혼, 동거, 사별, 이혼, 별거상태와 비교했을 때는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사별, 이혼, 별거와 비교했을 때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혼인관계의 해체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소득의 감소나 정치

9) 흥미롭게도, 이론적·경험적으로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득이 본 연구의 모든 분석모델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2018년 KGSS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으로 측정된 소득 변수를 사분위수로 구분하여 4개 범주로 사용했지만, 소득의 범주를 달리 하더라도 소득의 유의미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한 선거(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다른 자료(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를 이용하더라도 그 패턴은 일관했으며, 그 선거를 분석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소득의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기동 2019).

심리적 자원의 감소 등 투표참여에 있어서 더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 및 투표참여의 성별격차와, 결혼의 해체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남에 따라 성별격차를 더욱 크게 만든다는 사실은 한국선거에서 여성 유권자가 과소대표될 우려를 함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 결혼 및 혼인상태의 정치참여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발견은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겠으나, 추후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보완될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간략한 논의를 진행한 후 글을 맺기로 한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 투표참여에 대한 결혼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이 결혼 후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이는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투표참여에 대한 결혼의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투표참여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결혼할 확률이 더욱 높고, 결혼 후에도 투표참여를 지속한다면, 이를 반드시 결혼의 투표참여에 대한 효과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반복적 설문자료나 패널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¹⁰⁾

유사한 맥락에서, 투표참여에 대한 결혼의 효과가 실존한다면, 그것이 결혼 그 자체의 효과인지 또는 배우자의 효과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결혼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소득수준의 향상 또는 삶의 안정성의 향상 등으로 인해 정치참여 수준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결혼 그 자체여부를 떠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정치참여 수준이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과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경험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가 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추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선거의 수준에 따라서 투표참여의 추진요인의 유형과 그것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혼인상태와 투표참여 간 관계와 그것의 성별에 따른 조건효과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 상위수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10) 일반적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 실험연구가 많이 이용되지만, 결혼 및 혼인관계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데이터가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영문자료

- 강주현. 2020.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당호감도와 여성 정치인 평가: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3(1), 1-32.
- 권혁용, 한서빈. 2018.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정부학연구』 24(2), 61-84.
- 김 욱. 2013.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 간의 연계성 분석.” 『정치정보연구』 16(2), 27-59.
- 김기동. 2019.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투표의 비용: 참여의 비용인가, 결정의 비용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 38(3), 5-38.
- 김민정, 홍지영. 2011. “정치적 역동성의 결정요인: 유권자의 투표참여 동기에 관한 교차국가 분석.” 『정치정보연구』 14(1), 241-267.
- 김성진. 2015. “여성경제활동 양상의 변화(2000~2013).” 『정치정보연구』 18(2), 223-248.
- 김지범, 강정환,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최성수, 최슬기, 김솔이.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도경. 2013. “가족 내에서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386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3(2), 75-97.
- 김창환, 오병돈. 2019.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1), 167-204.
- 박선경, 신재혁. 2019. “가족끼리의 정치에 관한 대화는 투표 참여확률을 높일까?” 『21세기정치학회보』 29(4), 1-22.
- 신광영. 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 45(4), 97-127.
- 이재철. 2018.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정치정보연구』 21(1), 187-214.
- 홍재우. 2012.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 세대정치와 정치사회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대학생의 가족 내 정치사회화의 영향력.” 『21세기정치학회보』 22(3), 183-211.

영문자료

- Atkeson, Lonna Rae. 2003. "Not All Cues Are Created Equal: The Conditional Impact of Female Candidates on Political Engagement." *Journal of Politics* 65(4), 1040-1061.
- Bartels, Larry M. 2002. "Beyond the Running Tally: Partisan Bias in Political 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24(2), 117-150.
- Beck, Paul Allen. 1991. "Voters' Intermediation Environments in the 1988 Presidential Contest." *Public Opinion Quarterly* 55(3), 371-394.
- Berent, Matthew K., Jon A. Krosnick and Arthur Lupia. 2016. "Measuring Voter Registration and Turnout in Surveys: Do Official Government Records Yield More Accurate Assessments?" *Public Opinion Quarterly* 80(3), 597-621.
- Bhatti, Yosef, Edward Fieldhouse and Kasper M. Hansen. 2020. "It's a Group Thing: How Voters go to the Polls Together." *Political Behavior* 42, 1-34.
- Bobbitt-Zeher, Donna. 2007. "The Gender Income Gap and the Role of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80(1), 1-22.
- Delli Carpini, Michael and Scott Keeter.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ow, Jay K. 2009.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Knowledg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Based and Returns-Based Differences." *Political Behavior* 31, 117-136.
- Fieldhouse, Edward and David Cutts. 2012. "The Companion Effect: Household and Local Context and the Turnout of Young People." *Journal of Politics* 74(3), 856-869.
- Granberg, Donald and Soren Holmberg. 1991. "Self-Reported Turnout and Voter Valid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2), 448-459.
- Grummel, John A. 2008. "Morality Politics, Direct Democracy, and Turnout." *State Politics and Policy Quarterly* 8(3), 282-292.
- Gruneau, Moa Frödin. 2018. "Reconsidering the Partner Effect on Voting." *Electoral Studies* 53, 48-56.
- Hobbs, William R., Nicholas A. Christakis and James H. Fowler. 2014. "Widowhood Effects in Voter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 Political Science* 58(1), 1-16.
- Huber, Gregory A. and Neil Malhotra. 2017. "Political Homophily in Social Relationships: Evidence from Online Dating Behavior." *Journal of Politics* 79(1), 269-283.
- Huddy, Leonie, Lilliana Mason and Lene Aarøe. 2015. "Expressive Partisanship: Campaign Involvement, Political Emotion, and Partisan Ident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9(1), 1-17.
- Inglehart, Ronald and Pippa Norris. 2000. "The Developmental Theory of the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1(4), 441-463.
- Iyengar, Shanto, Gaurav Sood and Yphtach Lelkes. 2012. "Affect, Not Ideolog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6(3), 405-431.
- Katz, Jonathan N. and Gabriel Katz. 2010. "Correcting for Survey Misreports Using Auxiliary Information with an Application to Estimating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3), 815-835.
- Kern, Holger Lutz. 2010.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ransitions out of Marriage in Great Britain." *Electoral Studies* 29(2), 249-258.
- Kingston, Paul William and Steven E. Finkel. 1987. "Is There a Marriage Gap in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1), 57-64.
- Koo, Bon Sang. 2019. "Traditional Gender Gap in a Modernized Society: Gender Dynamics in Voter Turnout in Korea." *Asian Women* 35(1), 19-45.
- Lazarsfeld, Paul F.,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1965.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ighley, Jan E. and Jonathan Nagler. 2014. *Who Votes Now? Demographics, Issues, Inequality, and Turnout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utz, Georg and Michael Marsh. 2007. "Introduction: Consequences of Low Turnout." *Electoral Studies* 26, 539-547.
- Lyon, Gregory and Brian F. Schaffner. 2020. "Labor Unions and

- Non-member Political Protest Mob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https://doi.org/10.1177/1065912920950826> (2021/09/09 검색).
- McDevitt, Michael. 2005. "The Partisan Child: Developmental Provocation as a Model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1), 67-88.
- Nickerson, David W. 2008. "Is Voting Contagious? Evidence from Two Field Experime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1), 49-57.
- Nie, Norman H., Jane Junn and Kenneth Stehlik-Barry. 1996.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terson, Richard R. 1996. "A Re-evaluatio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3), 528-536.
- Rolfe, Meredith. 2012. *Voter Turnout: A Social Theory of Politic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Mark Hanse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 Sandell, Julianna and Eric Plutzer. 2005. "Families, Divorce and Voter Turnout in the US." *Political Behavior* 27(2), 133-162.
- Schlozman, Kay Lehman, Henry E. Brady and Sidney Verba. 2018. *Unequal and Unrepresented: Political Inequality and the People's Voice in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wartz, Christine R. and Robert D. Mare. 2005. "Trends in Educational Assortive Marriage From 1940 To 2003." *Demography* 42(4), 621-646.
- Sinclair, Betsy. 2012. *The Social Citizen: Peer Networks and Political Behavi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nclair, Betsy, Margaret McConnell and Donald P. Green. 2012. "Detecting Spillover Effects: Design and Analysis of Multilevel Experi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4), 1055-1069.
- Silver, Brian D, Barbara A. Anderson, and Paul R. Abramson. 1986. "Who Overreports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2), 613-624.

- Smith, Amy Erica. 2018. "Talking It Out: Political Conversation and Knowledge Gap in Unequal Urban Contex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2), 407-425.
- Smith, Mark A. 2001. "The Contingent Effects of Ballot Initiatives and Candidate Races on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3), 700-706.
- Stoker, Laura and M. Kent Jennings. 1995. "Life-Cycle Transitio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ase of Marria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421-433.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oorpostel, Marieke and Hilde Coffé. 2012. "Transitions in Partnership and Parental Status, Gender, and Political and Civic Particip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8(1), 28-42.
- Wolfinger, Nicholas H. and Raymond E. Wolfinger. 2008. "Family Structure and Voter Turnout." *Social Force* 86(4), 1513-1528.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bstract

Marital Status, Gender, and Voter Turnout

Gidong Kim ■ University of Missouri

Da Bin Jung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e Mook Lee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tatus and voter turnout in South Korea. The socioeconomic model of voting explains that those with higher levels of socioeconomic statu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than their counterparts. Because getting marriage can increase income level and quality of life, marital status can be one important driving force for electoral participation. Analyzing the 2018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e find that married citizen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than those who are not. More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voter turnout is stronger among women than men.

Key Words: voter turnout, marital status, marriage, gender, socioeconomic model